

미국 대선과 향후 국내 영향

-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세계 이목 집중
- 한국과 관련성 높은 정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사
- 대선 이후 국내 금리, 경제, 가계에 미칠 영향 사전 진단

1 연구 배경

-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(11월 8일)를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 집중
- 이번 美 대선은 저성장 경제와 정치·사회적 불만 속에서, 샌더스·트럼프 신드롬으로 대변되는 **변화의** 목소리가 부각.
 - 민주당 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의 정책을 일부 수용하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 주자로 발탁.
 - 공화당 경선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배경이 전무한 **도널드 트럼프** 후보가 압도적 우세로 승리하며 돌풍의 주역으로 등극.
 - 두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의 **공통점과 차이점**을 살펴보고, 이를 토대로 대선 결과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사전 진단할 필요가 있음.

-
- 작성자: 김형준 연구위원 (051-663-8178 / hkim@hf.go.kr)
 -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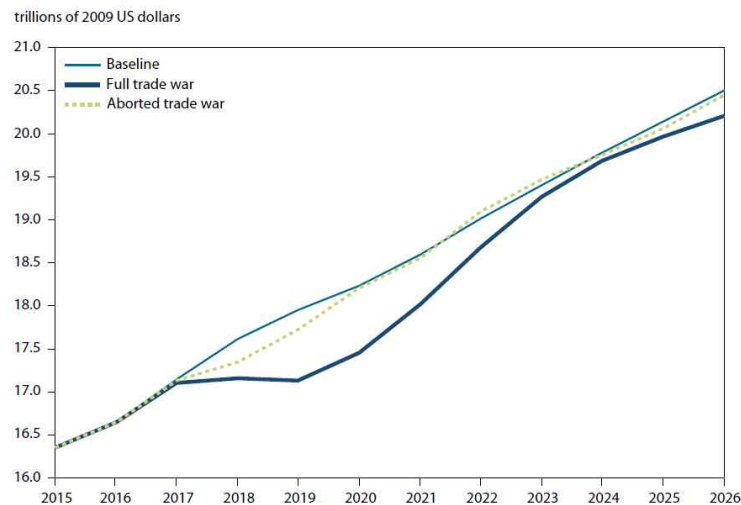
2 美 대선 후보의 韓 관련 주요 정책

□ 보호무역주의 강화

- 두 후보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, 이를 위해 TPP(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) 반대·환을 조작국에 대한 강경한 대처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 표명.
- 클린턴은 TPP(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)에 반대하지만, 한미FTA 등 기존 협정은 용인. 26일 대선 토론에서도 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정한 무역(fair trade) 강조.¹⁾
- 트럼프는 TPP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,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. 중국·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45%, 35%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등 파격적인 무역 정책 제안.
-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,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19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8%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. (그림 1, 표 1)
 -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징벌적 관세와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인해, 수출·수입의 감소, 수입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, 연준의 금리 인상, 주가 하락 및 변동성 증가, 신용스프레드 확대, 부채비용 증가, 투자 감소, 불황으로 이어질 것.
-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클린턴에 비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의 당선은 브렉시트(Brexit)에 이어 각국의 고립주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 있음.
- 박소연(2016)은 1930년대와 같은 극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가능성은 낮으며,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부품·장비 등의 중간재를 통해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.

1) “미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%이며, 다른 95%와 무역을 해야만 한다. 현명하고 공정한 무역 거래가 필요하다.”

[그림1] 무역전쟁 발발 시 미국 GDP 예상치



※ 주 : Baseline(기준치), Full trade war (중국·멕시코 관세 적용 및 보복), Aborted trade war (중국·멕시코 관세 1년 적용)

※ 자료 :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(2016)

[표1] 무역전쟁 발발 시 거시경제변수 예측

연도	기준치와의 차이(%)			예상치	
	소비	투자	정부수요	GDP 성장률(%)	실업률(%)
완전무역전쟁(Full Trade War)					
2017	-0.2	-0.5	-0.2	2.7	4.9
2018	-1.7	-5.2	-1.6	0.3	6.4
2019	-2.9	-9.5	-2.7	-0.1	8.4
2020	-3.0	-8.7	-2.9	1.9	8.6
2021	-2.4	-5.1	-2.7	3.2	7.8
2022	-1.6	-0.8	-2.1	3.7	6.6
2023	-1.1	2.1	-1.3	3.2	5.6
2024	-1.0	2.3	-0.9	2.1	5.3
2025	-1.2	0.8	-0.8	1.4	5.5
2026	-1.5	-1.0	-1.0	1.3	5.9
단기무역전쟁(Aborted Trade War)					
2017	-0.2	-0.2	-0.1	2.9	4.8
2018	-1.3	-3.4	1.2	1.2	5.6
2019	-0.6	-3.5	-0.8	2.2	6.0
2020	0.1	-0.2	0.0	2.7	5.2
2021	0.0	0.3	-0.3	1.9	5.3
2022	0.2	2.5	0.2	2.9	4.8
2023	0.2	1.9	0.3	2.0	4.7
2024	0.0	0.0	0.2	1.4	5.1
2025	-0.2	-0.9	0.1	1.6	5.2
2026	-0.2	-0.7	0.0	2.0	5.1

※ 자료 :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(2016)

□ 경제 정책

- 두 후보 모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**인프라 투자 확대**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, 특히 **교통 인프라** 투자의 중요성 강조.
- 클린턴은 버핏세 신설 등의 **부자 증세**를 통한 **복지 확대**를 주장. 정부 주도의 **인프라 투자** 및 **산업 개발**, **기후 변화** 대처 및 **신재생 에너지** 산업을 통한 **제조업 육성** 등이 주요 내용.
- **트럼프**는 최상위층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간소화 · 축소하여 감세를 통한 **중산층 회복**과 **기업 주도**의 개발 강조. 세제 혜택 및 기업에 대한 **규제 완화**를 통한 **제조업 육성**, **화석 에너지 규제 철폐** 등이 주요 내용.
- 이번 **美 대선**은 **큰 정부**와 **작은 정부**의 대결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,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 정책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.

□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

- 클린턴은 압박과 제재를 통한 이란식 접근모델을 계승하여, 현행 오바마 정부의 “전략적 인내” 이상의 **고강도 대북 압박 정책**을 펼칠 것으로 예상. 26일 1차 토론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**동맹의 중요성** 강조.
- **트럼프**는 한국의 **주한미군 방위 부담금 인상**을 포함한 동맹국의 비용 부담을 요구. **북핵문제**에서 **중국의 역할 확대**를 주장하는 한편, **김정은과의 대화** 가능성 또한 언급. 오히려 한국의 역할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시각도 존재.²⁾
- **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크게 변화**할 수 있는 분야.

2) 제임스 김 아산정책 연구위원은 "트럼프는 안보에 관심이 없어서 당선되면 오히려 대북 문제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도 있다"고 전망

3 美 대선 이후 국내 영향

□ 금리 - 대선 이후 12월 금리 인상 및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증가

-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후 12월 FOMC에서 기준 금리 인상 기대.
 - 엘런 의장은 지난 8월 연내 금리 인상을 강력 시사했으며,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되었으며 단기 경제전망과 관련된 위험요인도 안정적이라며 조기 인상 가능성 시사.
 - 올해 2차례 남은 FOMC 가운데, 11월 회의는 미국 대선 일주일 전이므로 이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.
- 두 후보 모두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채권 발행을 주장³⁾하는 만큼, 재임 기간 중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의 정책 공약이 더 많은 재원조달을 필요로 하여 금리 상승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.

□ 경제 - 원화절상으로 대미무역 흑자폭 감소

- 지난 4월 美 재무부는 한국을 중국, 일본, 독일, 대만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,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을 권고.
- 보호무역기조 확산으로 외환시장 감시가 한층 엄격해짐에 따라, 대미무역 흑자가 지속되는 동안 원화 절상 예상.
- 트럼프 당선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부담이 가중될 우려.

□ 가계 -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 증가 우려

- 美 대선 결과가 국내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으나, 국내 경제와 가계 소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클린턴에 비해 정책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국내 경제 및 가계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 수요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 있음.⁴⁾

3) 클린턴 후보는 미국재건채권(Build America Bonds) 발행을 재원조달 계획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, 트럼프 후보 또한 채권발행을 주요 재원조달 방안으로 채택.

4 결론 및 시사점

□ 클린턴 vs. 트럼프

- 클린턴의 지지율을 트럼프가 뒤쫓고 있으며, 26일 1차 토론 이후 양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. 클린턴이 다소 우세해 보이나,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추가 변수 발생 가능.
- 이번 美 대선은 국제주의와 고립주의의 대결이자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결로, 향후 국제사회 정책 방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.
- 저성장 경제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피할 수 없으며, 인프라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 과정에서 금리 상승 압력 발생 가능.
- 클린턴 당선 시, 여러 분야에서 오바마 정부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미치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.
- 트럼프 당선 시,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. 공약만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미국의 정치·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.

[그림2] 클린턴 대 트럼프 지지율 변화



※ 자료 : realclearpolitics.com (9월 28일)

4) 이용래·정의철(2016)에 따르면, 국내 주택수요 결정요인 추정 결과 소득 변동성 확대는 주택구입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.